

# 철강업계, 내수·수출 ‘힐힐’... 3분기 ‘역대급 실적’ 예고

세계 경기 회복에 철강수요 급증  
현대제철 영업이익 전망치 7328억  
동국제강 당기순이익 1432억 추정  
포스코 잠정 영업이익 3조 돌파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업계가 ‘위드 코로나’와 ‘중국발 전력난’ 등 여러 호재가 이어지면서 실적 고공행진을 예고했다.

포스코가 지난 3분기 사상 최초로 영업이익 3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다른 철강업체도 국내의 철강 수요 증가와 단가 상승세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현대제철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현대제철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컨센서스)은 73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00%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분기별 기준 역대 최대치인 전분기의 5453억원보다 2000억원 가까이 많은 규모다. 매출액은 39.2% 증가한 6조2104억원, 당기순이익은 5017억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컬러강판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동국제강도 호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내달 중순께 실적을 발표하는 동국제강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172.6% 증가한 2337억원이다. 최근

10년래 최대치인 전분기의 2070억원보다 267억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매출액 역시 48.4% 증가한 1조 9260억원, 당기순이익은 286.9% 늘어난 1432억원으로 추정된다.

동국제강의 실적 개선은 컬러강판 판매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컬러강판은 열연강판에 표면처리를 해 색깔을 입힌 강판으로 최근 컬러가전 인기와 건축자재 사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철

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컬러강판 생산량은 157만9460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130만7591톤)보다 20.8% 늘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13일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은 3조1100억원으로, 분기 실적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발표 직전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19.8% 높은 수준이다. 또 포스코가 이같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는 배경에는 최정우 회장이 강조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자리하고 있다. 3분기 포스코의 비(非)철강 부문 영업이익은 8100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4049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2분기(5943억원)에 비해서도 36.3% 증가했다.

국내 철강사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배경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으로 세계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방산업의 철강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수 집중과 탄소중립을 강

화하고 있는 중국이 철강 감소와 수출량을 줄인 것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연간 5000만~1억톤이 넘는 철강재를 수출하며 글로벌 철강시장의 공급과잉은 물론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게 했다. 하지만 올해 수출량을 줄이면서 세계 시장에 공급과잉 현상이 사라졌고, 여기에 수요까지 회복되며 철강재 가격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석탄 부족으로 인한 전력난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전력난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철강사들의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 하락한 반면 철강재 가격은 상승하면서 올 하반기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며 “수출 시장은 물론 내수 시장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철강업계의 분위기는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방통위, 인앱결제강제금지법 후속조치 나서

구글·애플 이행계획안 재제출 요구  
“사실조사 등 불법행위 강력 대응”

구글이 정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이행안에서 원본적 수준의 답변만을 내놓았으며, 애플은 아예 현행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며 시스템은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방통위 위원회가 시정조치에 나섰다.

방통위는 앱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14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방통위는 최근 구글, 애플 등 앱마켓사들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바 있으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과 애플은 지난 11일 각각 방통위에 인앱결제 방지법에 대한 이행안을 제출했다.

구글은 이행안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앱마켓에 허용할 예정”이며 “수익화 모델 등 여러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

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내놓지 않았다. 또 계획이 구체화되면 이행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애플은 “현재의 정책 및 지침이 개정안에 부합한다”며 “현재도 인앱결제를 앱 개발자에 강요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이폰에서 작동되는 모든 앱이 애플의 앱스토어를 거처도록 하고 수수료 30%를 청구해온 애플은 이 같은 정책들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자의 85%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비율은 전체 앱 중에서 게임 등 콘텐츠 앱을 제외한 비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게임, 음원, 웹툰 등 콘텐츠 분야에서는 인앱결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방통위는 또 제출된 계획과 함께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 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하위법령 정비와 사실조사 착수 등을 위해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19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분야별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도 본격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우선,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9일부터 운영되어온 제도정비반에서 마련한 시행령과 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한다.

방통위는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등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앱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마켓 운영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방통위는 앱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편, 앱마켓사의 가시적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채윤성 기자 echo@

## 경총, 대선 정책 건의서 발간

### 손경식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 절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규제 혁파 등 다양한 정책방향 제시

“코로나 19 이후의 급격한 사회·경제 구조 변화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조성해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회장은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내놓은 ‘제20대 대선후보계 경영계가 건의 드립니다’ 건의서의 발간사에서 “지금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 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해 이를 현실감 있게 전달하는데 초점을 뒀다.

손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많은 나라들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팬데믹 이후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미래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실패에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입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국민적 관심사인 일자리·노사관계 분야는 물론, 우리 경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이슈들을 폭넓게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대선 건의서는 규제 혁파(해소), 상법·세법 등 법제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 중대재해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먼저, 경제 전반의 이슈를 다루는 ‘기업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파트는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과 함께 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영 관련 법제도 개선,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에 집중한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도약의 키워드’ 파트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축, 최저임금 제도 및 고비용·저생산성 구조의 개선 등도 제시하고 있다.

노사관계 문제를 다룬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 노사관계, 이제는 선진화할 때’ 파트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노사관계 제도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합리적·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사회보험 등의 이슈를 다룬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사회 건설’ 파트에서는 복지 정책 분야의 무분별한 양적 확대를 지양해 줄 것과 인구지진 충격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 관행의 개선,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 등을 제안했다.

한편, 경총은 11월 초까지 주요 정당 및 후보 선거캠프 등에 건의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 코트라 K-방역패키지형 수출지원 사업 추진

의료기관-항공기업 코로나 진단 계약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이 도입되는 가운데 KOTRA(코트라)가 코로나 19 진단기기에 서비스를 더한 K-방역 패키지형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7일 코트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글로벌 방역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우리 기업의 방역물품 수출도 2020년 64억 달러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68%

의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마스크, 손세정제 등 기술격차가 크지 않은 제품의 경우, 수출 대상국들이 자국 내 생산을 통한 자체 조달을 추진하면서 우리 수출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트라는 국가방역시스템 및 노하우를 접목한 K-방역패키지를 대안으로 해외수요 대응 맞춤형 사업개발에 노력해왔다. 지난 6월부터는 여러 차례의 온라인 상담을 통해 국내 진단 서비스 전문 의료기관 A사와 글로벌 항공 서비스

기업 B사 간 코로나19 진단 대행 서비스 계약을 성사시켰다. 공식적으로는 이달 18일부터 진단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다.

이번 계약은 향후 ‘위드 코로나’로 급증할 해외 여행객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입국하는 탑승객들에게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통보 서비스를 24시간 이내로 제공하게 된다.

탑승객들은 항공권 발권과 동시에 코로나19 검사 예약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양성운 기자